‘13부 2처’ 정부조직 대수술

기능·효율 최우선 ‘强小정부’ 추구

‘중간 보스’ 부총리제 폐지 옥상옥 없애

경제부처 초대형화… 국회 통과 논란 예고

새 정부조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 18부4처의 직제를 기능 중심의 13부2처로 ‘슬림화’한 것이다. 7개의 부처가 줄었을 뿐 아니라 13개 부 중에 참여정부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3개에 불과할 정도로 그 변화의 폭이 컸다는 평이다.

또 다른 특징은 대통령의 직할체제가 강화된 점이다.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서 ‘중간보스’의 역할을 해온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청와대 비서실을 ‘연결통로’로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일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됐다.

◇**초대형 경제부처 탄생**=가장 큰 폭의 변화는 경제 관련 부처에서 나왔다. 참여정부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재경부·예산처·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 5개 부처가 기획기능과 실무기능으로 양분되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후 재경부의 금융부문만 따로 뺀 조직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예산권까지 틀어쥐면서 다른 정부 부처들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입김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모양새다. ‘공룡부처’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지난 98년 해체된 재정경제원이 부활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인수위도 ‘공룡부처의 전횡’을 우려한 듯 경제부총리제를 없애 기획재정부를 직급상으로 다른 부처와 같은 반열에 뒀다. 금융감독기능을 빼서 과거 모피아의 상징이었던 금융정책국의 힘을 줄이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유사 기능 부처 통·폐합과 기능 조정**=실물 경제부처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IT(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부의 기술부문이 통합됐다. IT를 키우고 과학기술을 살리자는 특수목적의 ‘별동대’를 없앤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인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융합과 통합의 개념이 적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책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별도 부처로 운영했던 곳들도 모두 합쳤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별도로 만들었던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로 흡수통합되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뀐다.

‘3면이 바다’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신설했던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합치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까지 통합, 농수산식품부로 만들었다. 다만,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식약청은 별도로 떼어 보건복지여성부 산하로 남겨뒀다.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 주체가 분산돼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로 통합한 것도 눈에 띈다.

참여정부 시절 정권홍보와 기자실 폐지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국정홍보처는 8년8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통일부의 폐지는 협상용(?)**=당초 남북관계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존속시키는 쪽이 유력히 검토됐던 통일부의 폐지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일부에서는 국회 입법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협상용 폐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정통·해수·과기·여성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통일부를 일종의 대야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포석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폭적인 개편에도 불구, 폐지대상 부처와 관련된 이익단체, 범여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위원회 절반으로

인수위, 416개중 215개 폐지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난립 시비와 비효율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재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 201개만 남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 위원회는 기능합리화 대상으로 분류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각종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부·처·청별로 설치된 위원회다. 특히 부·처·청별로 설치된 331개 위원회는 180개만 남기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31개 위원회 중 8개만 존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고, 11개의 법률상 자문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와 노사정위 2개만, 8개의 대통령령 자문위원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 1개만 각각 존치키로 했다.

다만 헌법상 4개 자문위원회는 모두 그대로 두고, 이 중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자문위는 심의기능을 유지하되 상설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그 기능은 각각 대통령실 내의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이 겸임토록 했다.

총리실 산하에 법률적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 40개 중 9개만 존치키로 했고, 대통령령이나 총리훈령 등에 의거한 9개 위원회도 2개만 남기기로 했다. 즉 총리실 산하 49개 위원회 중 11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밖에 존치기간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년 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년 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10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10년 7월)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 폐지키로 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경유해 中·동북아 관광객 유인”

‘이명박 시대’ 지역현안·공약 점검

❽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노선 변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무안국제공항을 이른 시일내에 활성화하려면 주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한데 묶으면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무안기업도시 등 장래 급증하게 될 교통수요에 대처하려면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를 앞당겨 완공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과정에서 ▲오송~광주(2015년), 광주~목포(2017년) 등 전 구간(230.9㎞)을 동시 착공해 2012년 까지 완공하고 ▲목포~광양 간 노선연장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당초 2015년까지 완공키로 했던 호남고속철도를 총 사업비 15조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3년 앞당겨 건설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겼다. 건교부는 오는 6월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2010년 1월에는 오송~목포 전 구간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 2012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용역조사에서 17㎞의 노선을 연장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변경안이 타당성을 확보하냐다.

전남도는 이와관련 4가지의 노선변경 필요성을 건교부와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의 관문역할을 담당할 무안국제공항에 호남고속철도를 연결해야 외국 여행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수도권과 중부권 이용객들도 무안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무안기업도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60만명, 무안기업도시 5만5천명, 남악신도시 15만명 등 장래 급증하게 될 교통수요에 대응하면서, 서남권 지역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혁신도시·J프로젝트 교통수요 대처 필수

‘반나절 생활권’ 호남·충청권 발전 견인

셋째,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역세권을 교합시키면서 광역고속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복합관광클러스터가 형성돼 중국이나 동북아 관광객을 보다 많이 끌어오는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넷째, 고속교통시설의 조기공급은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져 호남권과 충청권이 동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호남고속철은 경부고속철과 함께 우리나라 2대 교통 및 주요 생활축을 형성해 한반도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과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경부고속철과 함께 한반도에 고속 네트워크를 조기에 형성해 지역간 접근성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